

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1월12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환경부 소관

상정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예산안 | 3 |
| 가. 환경부 소관 | |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
| 다. 기상청 소관 | |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
| 가. 환경부 소관 | |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3 |
| 가. 환경부 소관 | |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환경부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열 번째 각종 청문회 대상 통과자가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이러한 나쁜 선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런 상태라면 국회의 청문회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명래 장관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마지막 장관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또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런 국회의 뜻을 잘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국회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래 장관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되신 만큼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몇 배 더 열심히 해서 이러한 국민적인 여러 가지 부족함을 채우는 장관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에 걸쳐 2019년도 환경노동 분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마련해 주신 국민과 기업은 물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 정책과 추진 중인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실효성 없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되어 온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은 정부의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 퍼붓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 투입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또한 위기에 빠진 경제현실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일들을 예산에 잘 담아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처를 통합하여 대체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차관은 오후 3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이석을 요청하였고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허락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기쁜 일은 신보라 위원님이 무사히 출산휴가를 마치고 오늘 회의부터 위원회 활동에 복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보라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환경부장관 임명하신 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국민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환경부장관께서는 장남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시원한 해명도 없었고 그에 대해서 자료제출 솔하게 우리가 요구했으나 응하지도 않으셨고, 또 편향된 사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임명을 강행하셨지만 그 위에 국민의 눈높이가 있고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먼저 사과말씀과 그다음에 편향된 사고가 아닌 공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이따가 환경부장관께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임이자 위원님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장관의 사과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러시지요.

○**이장우 위원** 우선 환경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를, 장관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은 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또 얼마나 불통한 정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장남의 강남 8학군 위장전입, 교수 신분으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 명의로 빌려 부동산 투기한 의혹, 장관후보자 지명 후에 장남·차남의 증여세 납부 문제, 특정 정치인 공개지지, 캠프 참여해 놓고 청문 과정에서 거짓 답변한 문제, 교수 재직 중 겸직 각종 위원회 싹쓸이한 전형적인 폴리페서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으로 명예훼손 100만 원 벌금형 문제, 만 2살짜리 손자의 차비와 세뱃돈 명목으로 2000만 원 가까이 썼던 문제 등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환경부 소관

(14시23분)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조명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과 흠결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나름대로 관리를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제가 미처 과거에 제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고요. 특히 청문회 이후 3주간은 정말 반성하고 또 질책과 지적을 마음속으로 수용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족하고 결례된 부분들은 제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환경부장관 일 하면서 그 부분을 반성하고, 늘 반성하면서 채워 나가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제 모든 여생의 남은 부분을 다 바치는 그런 것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대신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환경부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체 세입 1조 583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조 682억 원 등을 합하여 총 4조 68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금년보다 4.3% 증액된 6조 6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불안 1위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과 IoT 기술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예산, 저소득층과 민감계층 보호 예산 그리고 한중 공동 협력 예산 등도 고르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석면, 라돈 등 생활주변의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법 이행 예산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라돈으로부터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예산도 증액하여 담았습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수입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설치 등 산업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상하수도 SOC 투자를 그간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에 노력하였습니다.

상수도는 노후시설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먹는 물 안전과 지역 간 물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효율화하였습니다.

그밖에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하고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폐기물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9031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 매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기금 331억 원을 조성하여 건강 피해자와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위원님들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예산안이나 각종 업무보고에 기획조정실장이 쪽 해 오는 것을 관례처럼 위원장이 양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간사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이거 시대에 안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시대의 잔재이지, 답변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기초실장이 한다? 이것은…… 저희 국회의원들도 지금 모든 게 다 변해 가지고서 각 지역에서 머슴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관들만 구태의연하게 과거식으로 보고는 기초실장이 한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초실장이 없어서 또 자연환경정책실장이 하는데 자연환경정책실장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와서 대신 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장관께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양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장관님들께서는 업무를 숙지하시고 또 본인이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항상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효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강효상 위원님.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명래 장관께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유은혜 장관 사태도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 자유한국당, 야당이 정말 대승적으로 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고 여러 도덕적 흠결이 제기된 조 장관을 국익과 원활한 국정운

영을 위해서 오늘 저희 위원장님 이하 자유한국당, 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수용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정에 대한 성과로 보답해야 된다, 국민에 대한 보답을 정말 충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보정권이라고 출범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환경문제가 개선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저 같은 사람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환경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환경정책이 있느냐, 환경부가 있느냐라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강효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그래서 지난 전임 김 장관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환경부의 무능 때문에 경질이 됐다는 점에서 새 장관께서는 정말 유능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성과 있게, 지금 미세먼지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 취수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 있게, 속도감 있게 불철주야, 일주일에 7일을 국정에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이상돈 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실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능력 없는 장관이 너무 많았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나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뿐 아니라 저도 이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차라리 이럴 거라면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경륜 있는 의원들이 장관 하든가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대개 봤지만 도덕성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장관이 이런 환경정책, 환경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다 봤지 않았습니까? 과연 김은경 장관이 왜 물러났는가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런 것이 지금 위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새 장관이나 관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특히 실국장이 써준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읽는 장관, 그건 누구를 시켜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잘 알겠습니다.

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환경정책실장 박광석 자연환경정책실장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이하 환경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2019년도 환경부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제2의 가슴기살균제 참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사회 촉진 등 지속 가능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2019년도 환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71억 원 감액된 4조 6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세입은 1조 5834억 원, 전년도 이월금 37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조 682억 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 증액된 6조 667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균형특별회계, 에너지특별회계가 증액되었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농특은 감액되었습니다.

12쪽, 부문별로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대기분야는 28.2%가 확대되었고 기후변화는 47.0%, 환경보건은 17.1%, 자원순환 부문은 10.9%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수질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효율화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문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환경·수자원 부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투자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으로 전환하고 먹는 물 안전, 취약지역 물 복

지, 통합 물관리 등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동 분야는 18년도 대비 2.5% 감액된 3조 68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상수도 정비 확대, 미량유해 물질 안전대책 추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지방 상수도 확충, 물 부족 지역에 대한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취약지역 물 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환경기초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토양·지하수 관리도 추진하며 아울러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사·중복 사업 지출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물환경·수자원 부문 세부사업 현황은 16쪽에서 21쪽까지 표로 정리하였으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후대기·환경보건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보건 예산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동 분야는 전년 대비 27% 증액된 1조 20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조기 폐차 등 노후 경유차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였으며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정책기반 강화 및 국제협력 예산을 확대하였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 예산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였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설립,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건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후대기·환경보건 부문 세부사업 현황은 26쪽에서 29쪽까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자원순환·환경경제 부문입니다.

재활용률 제고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수출지원사업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동 분야는 전년 대비 2.1% 증액된 66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환경경제 분야에서는 중소환경기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을 지원하고 환경 분야 R&D에도 지속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는 환경부 R&D 예산을 정리하였고 33쪽에서 36쪽까지는 자원순환·환경경제 부문 세부사업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자연 분야입니다.

보전·복원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동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액된 6393억 원입니다. 38쪽, 39쪽에 자연 분야 세부사업이 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쪽 환경 일반 부문입니다.

환경 일반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12.3% 증액된 278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역시 40쪽, 41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2쪽, 43쪽은 환경부 신규사업 현황표를 정리했습니다. 총 18개 사업에 60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쪽은 2018년도에 완료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45쪽부터는 수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7쪽, 수계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19년 수입은 1조 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95억 원,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은 전년 대비 1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 수계기금 지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조 328억 원입니다. 토지매수, 수변구역 관리, 여유자금 운용 등이 증액되었고 주민지원사업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49쪽에서 52쪽, 수계별 운용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부터는 2019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5쪽,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계획은 331억 원으로 자체 수입 136억 원, 정부 내부 수입 10억 원, 여유자금 회수 185억 원입니다.

56쪽, 지출계획은 331억 원으로 사업비 156억 원, 기금운영비 19억 원, 여유자금운용 156억 원입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석면기금 부문별 주요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공공하수도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2019년도 한도액은 18년도 대비 1389억 원이 증가된 1942억 원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하수관로 61.958km, 여수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등 총 일 1980t 처리용량이고 오수관로 104.4km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안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 노동시장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어려운 고용 상황에 직면하여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의 일자리 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22% 증가한 23조 457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안도 금년에 비해 13.9% 증가한 27조 1224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크게 5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청년들이 당당하게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 명에서 18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7만 5000명에게 최대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신중년, 장애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90일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 지원도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00개를 새로 만들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5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및 표준사업장 설립 등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고용안정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금 등 고용창출장려금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등 사회적기업 창업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을 통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등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산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폴리텍대학의 학과도 신설·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심의 고급훈련 지원 등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늘려가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금년보다 5.1% 감액한 2조 8188억 원 수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확인 확대 등 산재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은 당면한 고용부진 상황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 차관입니다.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입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27조 1224억 원으로

서 금년 대비 13.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등 회계 예산이 7조 1159억 원, 18.7%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은 20조 65억 원입니다. 12.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기금이 12조 9794억 원, 산재보험기금이 5조 9807억 원 규모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예산이 정부부처 전체적으로는 23조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이 16조 4700억 원 규모입니다. 금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1조 7270억 원, 고용서비스가 9821억 원, 고용장려금이 5조 5800억 원, 실업소득 지원이 8조 1190억 원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주요 증액 신규사업 중심으로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금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참여 경로와 관계없이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는 올해보다 다소 규모를 줄여서 전체 2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41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사업이 내역으로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고용장려금이 금년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만 명 그다음에 신규로 9만 8000명 해서 전체 18만 8000명 대상으로 714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 11만 명 했는데 내년에는 신규 12만 명, 작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왔던 분들 포함해서 전체 27만 5000명 대상으로 1조 37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그리고 지자체별로 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0개소에 56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취업 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57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

출산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50만 원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임신, 일용,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2만 5000명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서 5일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억 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그다음에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등과 관련해서 전체 육아휴직급여가 내년에 1조 1388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전반적으로 사용기간 확대, 급여 인상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래쪽의 직장 어린이집은 금년도 3개소, 내년도 10개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28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노무사 등을 배치하거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강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규모는 2500명 규모로 적습니다만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회공헌활동사업은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신중년 적합직무에 대한 고용장려금사업을 최대 80만 원 1년간 해서 27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해 넘어갈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그러니까 핵심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예,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고용훈련,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0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고용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창업팀에

대한 지원 확대, 성장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안정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금년도보다 대폭 확대하여 1조 3000억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선도인력 양성과정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개편 등을 통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9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내역으로 신설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 정도 감액한 2조 8188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액채당금의 상한액을 저희들이 일반채당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산재예방 설명 올리겠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관련해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으로 74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방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주요 증액사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그다음에 특고 등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적용 확대 등으로 내년도에는 5조 700억 정도 규모로 산재보험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감액사업은 11페이지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12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은 13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이하는 각 회계 그리고 기금별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기상청 예산안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상현안을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먼저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상실황 감시, 예보관 교육을 강화하여 충분한 특보 선행시간을 확보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서해상으로 접근하는 너우 등 위험기상과 북상하는 태풍을 관측하기 위해 해양기상관측망을 보강하겠으며, 대기의 입체관측을 위해 기상관측선 및 항공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조기경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진업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산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장기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상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서비스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1% 감소한 3857억 원입니다.

기상관측 공백 해소를 위한 기상감시와 예보정확도 향상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준비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프로그램별 사업내역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안전한국 구현을 위해 관측망을 확충하고 기상정보 인프라 확충·개선과 공공서비스 역할 증진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8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982억 원이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188억 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5.1% 감소한 26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18년도 종료사업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사업으로 232억 원 규모이며, 2019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원가 대비 목표 50%에서 22.3%로 결정되면서 전년 대비 16.3% 감소한 77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3.1% 감소한 3857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하신 위험기상감시를 위한 관측망 확충과 첨단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등이며, 해상의 관측공백을 해소하고자 먼 바다 10m 해상기상부이 2대와 해양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해양시정관측망 구축, 제2해양기지 구축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보능력 제고와 예보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보관 교육, 근무환경 개선, 건강검진 등 다소 부족하지만 예산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후속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완료 등 연차 소요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상청 세출예산안은 8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상예보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상세한 예보기술 개발과 선진화된 예보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풍예보 지원시스템 개선과 운영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운영사업에 9억 원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5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상관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상관측망인 지상·고층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운영사업에 122억을, 기상항공기 운영사업에 24억을,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에 9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은 국가 지진재해 경감과 지진·해일·화산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고밀도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과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에 205억 원을, 기상용 슈퍼컴 운영사업에 2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이상기후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상과학정보 및 장기예보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운영과 기후변화 감시자료의 서비스를 위해 18억 원, 장기예보 선진서비스체계 구축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해양기후정보생산 및 제공사업은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09억 원, 기상관측선 운영비 14억 원, 제2해양기지 건립과 1기지 운영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상기후산업 활성화 및 기상산업시장 확대를 위해 105억 원, 기상클센터 운영에 18억 원을,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빅데이터 기반 융합시스템 개선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치예보 및 지진업무 지원·연구에 72억 원을, 범부처 융합 및 이중편파레이더 활용 기술 개발에 35억 원을,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88억 원, 지진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에 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기상관측위성 개발사업은 천리안위성 지상국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에 84억 원을, 정지궤도위성 지상국 개발 89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사업으로 기상·지진See-At기술 개발연구에 186억 원을,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 개발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책임행정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국립기상과학원 운영 및 연구개발에 306억 원, 항공기상청 및 항공기상관측망 운영에 1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국제협력 교육홍보 프로그램입니다. 개도국 지원 등 기상 분야 국제협력 및 기상지식 보급사업 등 교육 분야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기상행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며 전년 대비 2.9% 증액된 11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상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기상청이 기본에 충실하고 정확한 예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담을 수 있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위탁사업비를 실제 취업률보다 낮게 적용하였는데 실제 취업률을 고려하여 위탁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고, 신규로 저소득층에게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지원수준이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보다 낮으며 저소득층이 제출서류를 청년보다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가입자들이 가입 후 1년을 전후로 중도해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로 판단되므로 1년 이내의 취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도해지 건수와 사유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중도에 해지한 자 등 사업의 수혜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사업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고용보험료를 인상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8년도 지원 인원, 피보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기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기가입자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5인 미만 사업장 추가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은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구직자를 지원한다는 본래의 사업 취지를 달성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활동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수급자들의 지원금 사용처 우려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업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하단입니다.

노동위원회전문성 강화사업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매년 전용이 발생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패소비용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패소율, 소송비용 등 이행강제금 반환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고용보험기금사업 중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에 일부 인기직종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훈련인원 공급에 상응하는 취업수요가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률 등 훈련 성과를 반영하여 훈련성도가 좋은 직종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및예방기금사업 중에 산재보험

급여사업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재해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실적에 비추어 높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출퇴근재해 대상자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에 장애인인식개선지원사업은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및 교육강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안전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로 정비 등의 사업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및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사업은 수수료 등 수익을 고려하여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다른 기관의 인증·검증 관련 업무와의 조정 또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물기술인증원 운영사업은 출연금으로 편성할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 비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물기술인증원 입지, 설립·운영계획 및 인증업무 수행 범위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 부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집행 부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부문에서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사업은 환경공단의 영농폐비닐 처리시설을 습식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현재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생태보전 부문 중에서 생태계훼손지 복원사업은 협력금 규모에 비해 예산을 과소 편성하고 있어 복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꾸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등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환경보전 일반 부문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운영사업은 2018년 6월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보건 기반 강화 협력에는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의 유치에 필요한 예산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연구 등에 있어 앞서 검토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와 일부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사업은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별도의 사업관리기관을 내세워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간에 사업 특성 및 역할과 관련하여 중첩되는 부분은 없으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위원님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강효상 위원 예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숨넘어가는 문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우리 자동차산업의 직접고용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

○강효상 위원 39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직간접으로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합치면 자동차산업으로 먹고사는 국민들이 한 1000만 명은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작년에 자동차산업 직접고용 인원이 40만 명에서 1년 사이에 1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만 해도 7000여 명이 감소하면서 고용참사의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체 1차 협력 상장사 89개 중에 42개 사가 지금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말이면 아마 법정관리,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만 보더라도 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전체 제조생산액의 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지금 여신을 마구 회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못 들으셨어요?

한번 자동차부품업체 사장님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금융기관들이,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비 오는데 우산을 뺀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사내유보금이 바닥난다고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도 11월 중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자동차부품업체의 실적위기, 고용위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이것은 산업부 소관이어서 우리는 지금 대책

이 없다'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경제장관회의 멤버 맞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금 자금 지원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부도나기 전에 이 문제…… 1년 전에 사실은 자금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마는, 만사지탄이지만 빨리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고용대책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난번에 발표한 혁신 성장 및 일자리창출 지원대책 때도 저희 부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업종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을 했고요.

○**강효상 위원** 그러니까 의견 개진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다음 달에 산업부에서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고……

○**강효상 위원** 다음 달이면…… 지금 12월인데요 숨넘어갑니다, 자동차업계는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 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환경부장관님, 조명래 신임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총리 공관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련 회의가 열린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물론 참석은 환경부차관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환경부차관이 하셔도 되겠지만 가끔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용역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낙동강 수계 전체의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용역, 구미 산업폐기물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용역 등 두 가지 용역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낙동강 수계 전체 물관리에 관한 통합 용역에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확인차 질문드렸고요.

또 하나, 청도 운문댐의 물을 대구와 울산이 일정 비율 공유한다는 합의도 거기에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대구의 먹는물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이후에 실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대구 취수원, 대구 수돗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청도 운문댐 물을 대구와 울산이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대구시민들께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께도.

이 두 가지 용역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 4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부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실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꼭 차질 없도록, 예산이 확보되고 이 문제가 정해진 시한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물산업클러스터가 대구에 내년 6월에 준공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실 기자재 일괄 구입이 꼭 필요한데, 관련 예산 196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196억 원은 단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강효상 위원** 질문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이전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이 물산업클러스터가 있는 대구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인 확보와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확보를 위해서 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설립을 포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196억 원은 단년도 예산이라기보다는 3개연도에 걸쳐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 부처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아마 행안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어느 곳이 최적의 입지가 될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리고 물기술인증원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것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실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회의가 겹쳐서 위원님들의 의석수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

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환경산업기술원, 그중에서 글로벌담환경기술 이것 보면 약 10년간 7000억 원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작년에 수십억 줄였고 금년에도 30억 원 줄여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납득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특히 2017년 국감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한번 평가를 해서 사업단장들이 했던 사업 같은 것 다 없애고 평가해서 12개 과제를 중단했는데 진짜로 위원님들이 한번 내용 들여다 보고 제목이라도 보게 되면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김학용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사업단 수출 성과 제고를 위한 수출전략 수립 연구하는 데 매년 2억 몇천만 원씩 오륙 년을 연구한다는 게 상식에 안 맞는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업단 문제가 이렇게 뭉개 버리고 또 예산 청구해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감 끝나고 얼마 안 있어 예산 하니까 그냥 국감에서 너희는 떠들어 봐라, 우리는 예산 간다 맨 이런 배짱이라고, 도대체. 그래서 나는 기술사업단의 글로벌담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예를 하든가 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귀 기관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이 환경부 감독하에 다 평가해서 해서 2018년 12월까지 국회와 감사원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이 보고도 안 해 놓고 나서 이 예산 그대로 다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것 일단 유예시켜야 되고 크로스보더 컷(cross-border cut)을 해서 적어도 수백억은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500억이 넘고 기술원 예산까지 하면 근 1000억인데, 1000억이면 환경산업공단에서 쓰는 게 1000억이에요. 환경산업공단은 시설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일이 있잖아. 국립공원공단은 3000억 쓰는데 1000억 퍼부어 가지고서 기술원이 과연 뭘 하는지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감 거의 끝나고 나서 생긴 사건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야. 공공기관에서 노조

근로자들이 임금이 밀렸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감 거의 다 끝나 가는 10월 25일 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술원이 패소했어요. 235명이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등 하는데 이것 정말 너무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노조가 기관장과 간부들을 불신하는 것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임 원장 시절에 발생한 건데 지금 기관장이 바뀌고 1년 반 지났으면 이것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3년간 임금채권이 또 있다고 소송을 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도대체 이런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글로벌탑뿐 아니라 환경기술원에 대해서는 과연 예산을 줘야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수자원공사나 국립공원공단이나 환경공단처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것 문제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무심하게 관례적으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전단체에 관한 지원예산인데 이게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무부에 있을 때 자연보전협회, 자연보전원 중에 내무부에 있을 때 했다는 이른바 관변, 그 당시에 했던 그런 단체가 자연보전협회라는 게 있고 또 국립공원이 옛날에 건설부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수십 년 동안 타성적으로 그냥 5000만 원씩 죽 준 것이 있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사업비를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천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신탁 그것도 이제 법이 바뀌게 되면 사업비로 나가야지 무조건 운영비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액수가 기관당 5000만 원, 4000만 원, 1억 그러는데 타성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어요, 아무도 보지를 않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보면 저런 단체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억지로 일했다는 것뿐이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세미나 같은 것 보면 동호회처럼 자기들끼리 국립공원 가서 워크숍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과거 시대부터 있었던 단체한테 과연 몇천만 원이라도 타성적으로 계속 줘야만 되는가, 나는 이것 환경부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좀 말씀드릴 것이 반달곰을 살리기 위해 지역 상생·공존을 위해서 단체장이나 지역단체에서 이렇게 선언문도 하고 많은 단체장이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몽땅 다 깎았어요. 그러면 저기에 사인한 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다 뭐가 되고 시민단체들은 뭐가 됩니까? 저것은 환경부에서 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하시고……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안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이상돈 위원님께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라든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실화된 사업 운영을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협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앞으로 이 협회의 일은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또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달가슴곰 예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비례대표이신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노동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제가 ‘탄력근로제 기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게 되면 과로사 관련 기준 고시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답을 하실 때 ‘기준 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이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건강권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만성과로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성과로 기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야마 캡이,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떻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정책이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되고 정부는 어쨌든 6개월 얘기를 계속하실 겁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지 않고 ‘아무튼 그런 방안을 내겠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그 캡 이야기가, 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 지금 이런 것 검토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대안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주 최대시간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는 주가 연속해서 몇 주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대안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런 게 계산이 나오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고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특정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논의를 계속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뚜렷하게 답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11시간 캡 씌우는 것도 계산을 해 봤습니

다. 그런데 그 계산 안 나와요. 아시지요, 계산 안 나오는 것? 하루에 11시간 근무하고 밤 10시에서 그다음 날 9시까지 11시간을 쉬어도 5일 동안 55시간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 날 5시간, 9시간 일하면 60시간, 64시간 다 넘어갑니다. 그것 다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방법 안 돼요.

그러면 6개월로 기간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토록 지난 행정해석이 잘못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라고 이야기했던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토요일·일요일에는 절대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야에 과로사 기준 고시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셋 다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2011년도에 이명박 정권 시절 산학협력단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전 보수정권 시절 아닙니까? 보수정권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 ‘주당 60시간이 넘으면 과로 관련 질환 위험이 2배나 증가하는데 이것이 인과관계가 50%가 늘어난다는 기준이므로 예방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높다. 그래서 과로의 기준을 52시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2시간 못 맞추고 60시간·64시간으로 맞춘 건데 이명박 정부, 과거 보수정권 내에서 52시간을 검토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60시간·64시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허물겠다, 이러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변 없이……

또 하나, 임금보전 방식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보전 안 했을 때 제재할 조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임금보전 방법의 경우에도 노사 간에 사전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사전에 논의를 해도 뭔가 벌칙조항이 없는 한은 사업주가 안 지키면 그만이지 않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난 과거에 있었던

임금보전에 대한 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넣으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 이렇게 두리뭇실하게 얘기하고 일단 6개월로 늘려 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은 분명히 전부 패키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논의하면서 거기서 구체화된 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노동부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 다 경사노위에다 떠맡겨 놓고 거기서 합의 안 되면 그다음에 또 국회에다 떠맡겨 놓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정미 위원** 노동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저희가……

○**이정미 위원**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님의 생각이 뭔지. 노동부 수장이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자고 하는 엄청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두리뭇실하게 답변해 가지고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를 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안을 지금 다듬어 가고 있으니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 주 안까지 구체적인,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제출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 아무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는 행정부처 중에 가장 취약하고 힘이 약한 부서기 때문에 그냥 정부 안에 가 가지고 똑같은 n분의 1의 목소리를 내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정부 당시에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취임해서 이 자리에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보수정권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환경부장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쨌든 청문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장관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이해도 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신을 정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유발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정애**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밀려 있어서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제 것 1분 드릴게요.

○**이정미 위원** 아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환경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 임대형 민자사업, BTL 사업에 관해서 얘기 좀 하지요.

저는 도로의 BTL 사업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부에서도 이제는 오수관로, 하수관로에 BTL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미 올해 1건, 553억을 했던군요. 장관님 잘 모르시면 담당 국장 거기에 서 보세요.

내년도 계획에 부산시 사하구의 하수관로 61.958km 778억 원, 그다음에 여수시의 처리장 1980t짜리 오수처리장하고 오수관로 104.4km에 1163억 원 해서 2개 사업에 1942억 원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여기 기업은 어디가 맡기로 했어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 조희송** 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 조희송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신창현 위원** 이 내용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카톡으로라도 빨리 물어보세요. 이게 어느 기업이 선정되었는지 제가 다른 질문할 동안에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BTL 사업의 제일 문제점은 이 기업들도 어차피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 주고 그 이자를 사업비에다가 계상합니다. 정부가 20년 동안 나누어서 갚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 조희승** 예, 그렇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환경공단이 하면 환경공단은 이윤 포함하지 않잖아요.

장관님 잘 들으세요. 제가 BTL 사업에 부정적인 이유를 아시겠지요? 같은 세금을 주면서 왜 우리가 기업 이윤까지 세금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1942억에 대해서 적어도 10%의 이윤 보장한다면 194억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이런 BTL 사업의 이윤 10% 정도 하면 양심적인 것이지요. 보통 15~20% 정도 계상합니다.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을 환경공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기업에다가 이윤까지 쥐 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싶었어요, 그런 시급한 절박성 같은 게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면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는 평소에 공공서비스는 공공이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투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이용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외국에 살아 봤을 때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연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민투에서 하는 것이, 민간기업이 하는 것이 좋은지는 주도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주신 그런 의견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공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 똑같은 사업을 공단이 할 경우에 들어가는 원가하고 BTL로 기업에 맡길 경우에 들어가는 원가를 비교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같이 판단해 보자고요, 어느 게 바람직한지.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이제 들어 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기상청.

지난 6월 달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했잖아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창현 위원** 국제선 착륙할 때 기상정보 사용료는 6170원에서 1만 1400원, 영공 통과할 때는

2210원에서 4820원 이렇게 인상했는데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대형 항공사들이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신창현 위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질 것을 전제로 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나요?

○**기상청장 김종석**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수수료 예산은 45억 93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것은 28억 5200만 원, 17억 4100만 원, 37.9%가 깎였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상청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기상정보 사용료는 인상해 봤는데 수입은 오히려 40%씩이나 줄여서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아는 분이 대답 좀 해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금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금란입니다.

올해 잡혀 있는 세입 예상액이 올해 수수료 인상된 분을 감안해서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잡혀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그것을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창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45억 9300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예산이다, 맞아요? 아무리 과다하게 잡혔어도 기상정보 사용료가 거의 2배로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수입 예산이 40%가 줄 수 있어요? 청장님, 한번 다시 챙겨 봐 주세요.

○**기상청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퍼센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창현 위원** 소송에 이길 것을 전제로 해서 수입 예산을 잡아야……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금란** 이길 것 전제해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과거에 과다하게 잡힌 것을…… 맞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런데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자료 좀 저한테……

○**기상청장 김종석**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래 장관님, 신창현 위원님 지적하신 하수관로 BTL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BTL 사업과 관련한 것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분명히 분류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으로 실질적으로 설계가 되고 실제 시공이 된 것이 많아서 깨끗한 물이 오히려 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비용만 더 높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BTL 사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또 저렇게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신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폐기물 대란이 늘 이슈화가 됐었고 방치 폐기물 문제들이 연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던 것 기억을 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신보라 위원** 그런데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저희가 8월에 환경부에 실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당시에는 방치 사례가 38건 그리고 방치량이 65만t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언론 보도된 방치폐기물 방치 사례를 토대로 저희 의원실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했더니 그제서야 환경부에서 방치 사례가 109건이 더 있었고 폐기물도 54만t이 추가로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나? 언론 보도된 그간 3년 동안의 방치폐기물 사례조차도 환경부에서 제대로 실태조사할지 이런 자료 내용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만큼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조사하면서 보니까 방치폐기물 문제가 폐자원관리과하고 자원재활용과 두 과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도 이 두 과에 연관되어 있는 TF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태조사도 엉망이고 대응팀도 없는 상황 아니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로는 이 폐기물을 그러면 처리하기 위

한 어떤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에 관해서 환경부가 예산안을 이번에 3억 정도를 책정했었어요. 그랬더니 책정은 왜 했냐라고 봤더니 그간 집행실적은 없었지만 기존의 관례대로 반영해 오는 통상적인 반영으로 그냥 3억 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방치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인식도 없으신 것 같고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안을 실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그냥 관성대로 3억 원 편성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예산소위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방치폐기물의 발생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치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 시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재활용시설에서 왜 나오냐고 봤더니 재활용시설에만 처분부담금이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출자들은 배출을 할 때 재활용업체의 처리부담금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쪽에 다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활용업자들은 처리할 부분만 처리하고 남은 것들을 또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방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부담금의 이런 상대적인 비용 문제가 방치폐기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정도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방치폐기물에 대한 이행보증제도도 문제인데 폐기물업체라면 방치될 것을 대비해서 이행보증제도에 가입을 하는데 이 이행보증제도에 가입을 했지만 사실상 이행보증기금에서 방치폐기물이 되고 있는지, 처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쌓아 두고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관리를 해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행보증보험제도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고 예산소위에도 반영이 되

계끔 빨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관련한 답변은 끝나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매립시설 중에 에어돔 시설이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신보라 위원** 그 에어돔 매립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뭐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입장은 지금은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위험성 문제도 있고 공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에어돔형 매립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양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2016년 8월에 이미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반드시 지양하고 하게 될 경우에도 대부분은 지붕형으로 만들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금강청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차관님이나 장관님?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제가 받았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미 받으셨지요? 무슨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지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2016년에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고 환경부 입장이 에어돔형은 지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청에서 2018년도에 2개 업체의 에어돔 매립시설 설치를 결국 적정 통보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물론 관련 내용을 아시겠지만 금강청에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도 저희 의원실에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누락해서 보고한다거나 허위보고를 해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질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도 챙겨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으로는 현장 지칭이나 이런 데서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법령 수준

으로 상향 조정해서 강제력을 둘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장관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과 덧붙여서 함께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먼저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건수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수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실태조사의 방법과 영역이 달라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다시 또 보고를 받았습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보라 위원** 그런데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데 언론 보도되시면 그 내용 다 모니터링하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언론 보도 내용 뜨면 바로 나가 봐서 현장 상황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전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금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부담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발생원인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처리명령,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등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처리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대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산이 아마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종합적인 대책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에어돔 시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에어돔은 환경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실무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아 가지고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에어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지방청이라든가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하고 지청이든 환경부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해당 지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그냥 지자체가 그 비용 부담하는 걸 일종의 보조하는 방식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정말 부적절하네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매칭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그게 주체가 명확하면 구상권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오히려 간단한데 지금은 누가 갖다 버렸는지 주체가 불명확한 쓰레기들이 산더미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대상이 없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래서 저희들이 권리 관계 같은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행정대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 문제라든가 구상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번에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셨겠습니까만 우리가 그냥 생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을 계속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고민이 된다고 하면 방금 신보라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게 에어돔 형식을 해야 되느냐 지붕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고.

또 문제가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허가해 주고, 그런데 실지로 그 매립장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질 같은 것들을 매립해서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게끔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충북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고가 툭툭 터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고 봐집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기침이 조금 잦아들면……

바로 찾아드시네요.

○**이용득 위원** 하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 임명을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임명되셨는데 어쨌든 그 대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 분야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대강 보 개방 관련해서 지하수 대책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작년부터 재자연화를 위해서 4대강 보 개방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창녕함안보 또 금강 백제보 여기에서 보 개방을 했는데 수막재배, 수막재배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용득 위원** 수막재배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약 500여 개 동에 1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보 문을 즉시 닫고 지하수 수위를 확보한 경우도 있었지요. 이 부분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용득 위원** 그런데도 농민들이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지요.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 당시 환경부에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있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후에 보 개방에 따라서 지하수위도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더라 하는 것도 조사 발표했지요.

그런데 환경부가 내년도 보 개방과 관련한 지하수 대책 예산이 111억이 편성됐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것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년도 낙동강 상류지역인 경북지역의 지하수 대책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서면으로도 얘기드렸고 해서 환경부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 지금 어쨌든 낙동강 상류의 경북 농민들은 보 개방

에 대한 걱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용득 위원**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가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불과 6개월짜리로 육아휴직제도를 제일 처음 만든 주인공인데 그 후에 육아휴직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고 죽 변화되어 왔어요. 수차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집단에서는 제도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거의 실시되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저출산 부분과도 연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아주 다양화되어 있지요. 보면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가 있는 반면에 한부모 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의 10% 정도나 돼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아휴직제도가 애를 낳았을 때 바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8세 이하 때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한부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는 아빠휴직제도가 이런 것들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이게 일부 집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한부모 가구에서 낮은 특별한 이유,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독일의 예를 들어 보면 한부모 가구일 경우에도, 지금은 양부모 가구나 맞벌이 가구 이런 데서는 1년씩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1년씩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한부모 가구에서는 한 부모니까 지금 1년밖에 사용을 못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기간을 줍니다, 한부모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등 이런 예도 반영해서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노동부장관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

음에 환경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한부모 가족이 한 분만이 근로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상 육아휴직 시에 근로소득이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생겨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래서 그 수당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특례제도하고 그다음에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육아휴직 기간 확대라든지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셨던 광암들 피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한파 때문에 물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서 아마 충분히 예측을 못 해서 지하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수 관련해서는 보 개방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선제적인 대책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수 공급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한 85억 원을 책정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관측정 확대를 위해서 32억 원 정도를 증액할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어쨌든 최저임금을 17년도에 16.4% 또 18년도에 10.9% 인상했는데 지금 고용상황이 확실히 안 좋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에 대한 장관님의 대책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재는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

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장우 위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상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이 그 수단이 되겠고요. 그 외에 관계부처랑 협의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10월 31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54.2%입니다.

○**이장우 위원** 현재가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는 51.3%인데, 11월이 벌써 중순이 다 되었는데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얘기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51.3%밖에 안 돼요. 이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금년도 예산 자체가 12개월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소기업의 경우에는 1인당 10개월분밖에 집행이 안 되더라 하는 그 2개월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매일 8000명 내지 1만 명씩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1년을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80~85%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 중에 자동차업종은 전년 동월 대비 9500명 감소했거든요.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타운송장비도 감소세고,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서비스 부문, 청소·방재서비스 9700명 가까이 또 줄었고, 인력 공급·고용 알선도 한 1만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가 40만 1000명,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지급자가 8만 1000명이 늘었다, 25.4%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근에 경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 실업자가 확 늘었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 실직하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조업하고 건설업 분야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주로 그쪽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이장우 위원** 실업급여 지급액이 6019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2267억,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7만 8000명 가까이,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심각합니다.

9월에 초단기근로자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34만 9000명인데 2018년도는 151만 3000명이 됐습니다. 쪼개기 고용 이런 부분이 8년 만에 최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좋아졌다고 일부 얘기하는 현 정부의 관계자들의 말이 완전히 잘못된 허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일자리 질은……

○**이장우 위원** 이런 단기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질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표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쁜 지표도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좋은 지표는 거의 없고 나쁜 지표만, 책으로 보면 책으로 한 권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관님도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야 되는 데요.

지금 2017년도 8월 달 보면 그때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0.7% 정도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89.3%입니다. 3분기 실업자 수는 106만 5000명, 어마어마하지요? 1999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실업자 수가 106만…… 3분기 30대 실업률은 3.6%, 1999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3분기…… 이것은 좀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1월에서 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1월에서 9월까지 제조업 생산지수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가한다 또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에 재투입된다 그러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월에 2%가 상승했어요.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소득 일부 올려 봐야 다 헛수고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비자물가지수가 2% 오른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작년의 경우도 한 그 정도는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장바구니 물가예요. 2.4% 올랐고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신선식품 이게 10.5%가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것은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장관님도 그런 인식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매출 규모가 590조 가까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죽지 못해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장우 위원**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습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는 하여튼 안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답답합니다, 인식만 늘 같이하고, 지금 서민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장관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경사노위원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시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괜찮습니다.

○**임이자 위원** 경사노 지금 막 가동을 해야 되

는데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아서 개문발차한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개문발차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내버스·시외버스, 모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내는 소리입니다. 개문발차하면 사고 나요, 위원장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문 닫고 가야지요. 개문발차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용어 자체를 갖다가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위원회 구성 다 했나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지금 의제별 위원회 다 됐고요.

○**임이자 위원** 예?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위원장들 다 들어오셨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다 됐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 다 끝났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이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누구누구인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경총·상공회의소·소상공인·중견기업·중소기업 대표자들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되지 않겠나 봤는데 경총에서 다른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임이자 위원** 왜 그랬을까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사용자 측 대표는 경총과 상공회의소……

○**임이자 위원** 그것을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올려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맞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쳐 놓고,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사단법인이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법적 지위에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예?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차이가 어떤 게 더 크고 상식적으로 어느 쪽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추천될 줄 알았는데 경총……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했는데도, 두어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임이자 위원 했는데도 경총이 그렇게 얘기했던 말입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확인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임이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정부와 관련해서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안 좋고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항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패짚죄에 걸려서 뺨 것 아닙니까, 패싱시킨 것 아닙니까, 경총 시켜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규모가 더 크고 어떤 형태로든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가 하

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경총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러니까 두어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되어서 여타 위원회, 위원장은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은 계층별 위원회가 또 구성돼야 됩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회까지 캠퍼더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위원회까지? 모든 인사 낙하산 인사, 캠퍼더 해 놓고 이제 위원회까지 캠퍼더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어쨌든 경총 추천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권한을 좀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평생 노동운동 해 오셨고 또 마지막에, 그 자리가 굉장히 호의호식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사명감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보완책 마련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임이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만드시 보완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임이자 위원 이것 안 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성현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계속적으로 지금……

○한정애 위원 무슨 장관님인지……

○임이자 위원 아, 장관님이 두 분이시구나. 제가 환경부장관님이 머릿속에 없나 봐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주휴수당 관련돼 가지고 또 대법원 판례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시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이것 보면 장관님께서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갖다가 포함되는 게 노동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외시키는 게

노동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제외시키게 되면 근무 형태나 아니면 종사상 사업장 규모나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외시켰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포함시키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데 제외시키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 어떤 혼란이 오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요, 또 월급이나 시급제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임이자 위원** 저는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만약에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까 안 할까를 고민 한번 해 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간외를 한다라고 봐지는 거지요. 물론 단적으로 아르바이트할 때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안 합나다마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2시간 범위 내에서는 근무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2시간 같은 경우는 1.5를 가산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임이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74만 원을 계산으로 해 본다면 지금 174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시급이 1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209시간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고치려고 하는 그 부분 갖고 했을 때는 8325원 정도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요? 약 25원 정도 위반이 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1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시키고 했을 경우에는 뭐가 커집니까? 통상임금이 커지지요, 시간외수당 우리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48시간 했을 경우 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209로 했을 경우에는 분모가 당연히 작아지기 때

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시간외수당으로 했을 때는 233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자가 한 12만 원 차이가 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대신 최저임금에 위반되게 되면 25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계산 다 해 보면 7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게 참 딜레마이기는 딜레마인데……

○**위원장 김학용** 1분 더 드려요.

○**임이자 위원** 딜레마이긴 딜레마인데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시행령을 갖다가 시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상임 위 위원님들도 지금 법으로 이 부분을 제외시켰다고 법을 발의해 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쪽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불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렵기는 합나다만 국회에서 만약 이 부분을 갖다가 법으로 그냥 통과시킬 경우에는 이게 또 혼란이 오니 이 부분도 경사노로 돌려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게 혼란을 좀 방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경사노위 논의하는, 물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하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제도와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노사단체와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단체도 좀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지요.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기상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하게 예산 깎고 올리고 그것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단도 내년이면 어떻게 할 거냐 또 APCC도 내년 이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고. 또 수치예보단에서 모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의 완성됐으니까, 지난번 태풍 같은

데 한번 돌려 봤나요?

○기상청장 김종석 아직 그것까지 돌리지는 못하고……

○이상돈 위원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아직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차세대 모델의 개발을 거진 앞두고 있는데 이미 2017년부터 운용하니까 허리케인 하비 같은 데 대해서도 제일 잘 맞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저것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지금 현재 계속 모델 개발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쯤 되면 병행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국감 때 한정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PCC도 뭔가 바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태풍센터도 위상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기상청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미국의 허리케인센터 같은 경우는 NOAA, 해양대기청은 워싱턴 D.C.에 있고 허리케인 오면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지금 예보국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돈 위원 예보국이니까, 그 다급한 시기에 서울하고 통화는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되고.

또 아시겠지만 예보관들은 굉장히 은퇴 앞둔 사람만 있고 젊은 사람들 다 기피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도대체 위원이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많고.

그다음에 기상과학원, 기상산업기술원 같은 것도 하나는 순수과학이다, 하나는 기술이다 그러는데 그 한계도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뭔가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 이런 것보다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제가 설명을……

○이상돈 위원 제가 끝나고 답변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부장관님께,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남부직업훈련원 이거 그냥 못 하면 이제는 땅 사기 어렵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복안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일단 저희 정부 예산 안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데, LH공사에서 금년에 계약 안 하면 더 이상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것은 소모되는 게 아니고 동탄역 근처에 위치도 좋던데 어떻게 무슨 수를 내서라도 확보를 해야만 되지 않는가…… 경기도 남부에 인구 제일 많고 최근 10여 년 동안에 장애인직업훈련원이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이거 그냥 예산당국 바라만 봐서는 안 되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글썄요, 그 복안은 예산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이상돈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제 질의시간 다 끝나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상돈 위원 그다음에 노발재단 이게 계속 국감에서 그냥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 나오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고 도대체. 국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국감에서 ‘너희들은 떠들어 봐라. 내일이면 잊어 버린다’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것 우리가 못 하겠다. 국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 넘겨 보세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데 이것은 한번 경제사회위원장이 말씀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노사발전재단의 취지에 맞는 사업입니까, 저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노사 협의하고 이런 거 하는 사업인데 저게 제일 많고 계속 커 간다고.

저게 과연 효과가 있으면 오늘날 일자리 문제 이렇게 안 생기잖아. 중장년 갖다 무조건 일자리 소개하면 뭐 해? 폴리텍처럼 교육훈련을 시키고 또 근로자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나는 저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데 어떻게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타성적으로 계속 예산을 주느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사고가 많았잖아, 기관장이니, 간부들이. 그 이사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관장 바꾸기로 했습니까,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난 11월 9일 날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이사회 때, 이사회의 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좌우간 결과적으로 해임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결과로 보면 해임의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돈 위원** 해임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계속 기관장을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상돈 위원** 아니, 국회에서 위원들 앞에서 그리고 노동계의 대선배들 앞에서 자기 신변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그것도 ‘너희들은 떠들어 봐라. 바다에 배 지나간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고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모욕이예요, 이걸. 그래서 이게 정리 안 되면 이것은 기관 예산 아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게 국회의 권능을 갖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책임지고 인사문제 해결해야만 됩니다, 청와대에다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도대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기상청장 김종석** 기상청장입니다.

질문하신 한수에는 2019년까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병행 운용해서 예보정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확도 높여져 가고 있으니까, 처음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특히 해상에 해상부이나 해양기지 건설하면 예보정확도가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태풍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CC는 현재 자체 기능 조절해서 기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원은 응용기상하고 기상장비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또 과학원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활성화 방향으로 개선책을 현재 마련 중인데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해 주신 대로 예보관 증원 문제는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인원 증가 문제를 협의 중에 있고, 아까 인사 말씀드릴 때도 처우개선 부분은 의료보험 등 특별한 보상책을 계획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진척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경기 남부직업능력개발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예산 증액을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환노위 소위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돈 위원** 그것 좀 어떻게 해서 반드시 반영을 시키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원래가 노사발전재단이 과거에 출범할 때 기존에 있던 몇 개 조직이 합쳐지면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경총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노사발전재단으로 합쳐져 있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우리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이 기능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게 남아서 계속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노발재단이사회 구성이 노사정에서 각각 추천한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사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차관이 참석하여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국회의 말씀 그다음에 우리 부에서 했던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을 들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다른 이사들이 그 부분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노동부장관님 제가 아까 시간이 좀 급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로 나가겠다고 하는 핵심 국정목표를 내걸었고 그중에 한 가지, 그 핵심 목표 중 한 가지가 근로시간 단축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정시간 일하고 적정임금을 받는 그런 나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좀 지나 가지고 곧바로 다시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아무리 머리를 짜내 봐도 6개월로 늘리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을까 저런 방법이 있을까 한번 다 계산을 넣어 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방법이 안 나와서 제가 장관님께 정말 답답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셨으니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 정당의 대표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무턱대고 근거 없이 반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이것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무슨 다른 복안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번 주 안에 꼭 저에게 그 대안이 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탄력근로시간제 이것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라는 그 원칙, 그 원칙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난 봄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산업현장을 들여다보니 불가피한 경우에 그것을 좀 초과해야 될 상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모든 것을 막아 놓고 있는 그 상황을 좀 타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정도 측면의

말씀이고 그 범위도 거기에서 국한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고민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저희도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까지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저희가……

○이정미 위원 언제까지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님을 쫓아가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노사정 논의가 시작되니까요, 저희가 노사정 그 논의를 시작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20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가 지금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환노위……

○이정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번 주까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얘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 주까지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핵심 권한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별로 없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기후온난화 이런 얘기 나와 가지고 환경부를 맨날 두들겨 패지만 실제 환경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공장을 규제하려고 해도 산업부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동차를 규제하려고 해도 국토부가 해야 되고 생활시설을 규제하려고 해도 지자체가 해야 되고, 환경부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핵심 권한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그래서 설악산, 흑산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김은경 전 장관께서 이 문제만큼은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많은 개발업자들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못매를 맞았던 것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임 장관님께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밀리지 않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마지막에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나노물질 함유 제품에 대해서 2019년에 나노물질 2종에 대한 독성시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화학제품 속에는 1369개의 제품에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사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얘기했던 것은 안전성 문제는 기업이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점검하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노물질 등록 및 평가를 위한 안전성 표준체계 마련 예산 이것만 가지고는 제품 안전을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가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흑산도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해양국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완전히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도 다 보여 드렸고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지금 정수장에만 검토가 되고 있고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생원을 조사하거나 이러는 데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2019년 예산에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조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갈수록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안 편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인지, 두 가지 질문과 아까 제가 신임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 나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는 그냥 말로서 열심히 하겠다 하기보다는 정책과 실천으로서 제가 꿈꿔왔던 한국을 녹색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이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때부터 아주 중요한 과제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만 제대로 해도 한국의 환경문제를 한 80%를 잡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대신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지금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를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물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기부나 고용부가 함께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나노물질 유해성 평가 방법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업이 제조하는 나노물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을 아주 강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KEI 원장 때 이미 해양수산개발연구원하고 제가 떠나오기 전에 바로 MOU를 맺어서 저희 연구원과 바다 쪽에서는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쓰레기를 포함한 미세플라스틱의 여러 발생원과 그 이동경로 특히 육상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전체 전 과정을 연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제를 환경부 과제로 지금 만들 참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임이자 위원, 김태년 위원, 송옥주 위원, 이용득 위원, 강효상 위원, 이장우 위원, 이정미 위원, 한정애 위원, 김동철 위원, 설훈 위원, 신창현 위원, 전현희 위원, 신보라 위원, 이상돈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지쳐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자제하고 서면질의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나랏돈 들여서 한두 달짜리 일자리같지 않은 허접한 일자리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일자리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구인 안성에도 자동차 관련 1·2차 벤더들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회사 구내 식당을 가서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아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 줄부도 사태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상승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운 데다가 은행에서는 앞으로 부도가 날 것이 예상되니까 목줄을 조여서 자금 회수를, 환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꼭 이 점을 잘 말씀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총을 통해서 외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데가 소상공인연합회인데 거기를 빼고 다른 데를 넣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도 공익위원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미세먼지 참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지만 환경부장관님, 이것 정말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도 어제 지역에서 어제 그저께 지역 활동을 좀 했는데 목이 칼칼해 가지고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오늘도 사실 지금 목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런데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 진짜 있는 사람들 이민 가지 대한민국에서 살겠냐 이런 얘기까지 사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금수강산이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자연환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봄도 아니고 가을에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미세먼지가 왜 오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몇 %는 대한민국의 책임이고 몇 %가 중국의 책임인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중국에다가도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냐, 그리고 국내 문제가 몇 %면 어떻게 국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적당하게 지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주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고 마침 제가 그 담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도 주민들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제가 아주 참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명확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님들, 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상돈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철저히 저희가 찾아내서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아주 소중한데 국가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 효 상	김 동 철	김 학 용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장 우	이 정 미	임 이 자	전 현 희
한 정 애			

○청가 위원(3인)

김 태 년	문 진 국	설 훈
-------	-------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조 명 래		
차	관	박 천 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금 한 승		
자연환경정책실장		박 광 석		

생활환경정책실장	유	제	철	광주지방기상청장	전	준	모
물환경정책국장	김	영	훈	강원지방기상청장	나	득	균
수자원정책국장	박	하	준	대전지방기상청장	서	장	원
자연보전정책관	정	종	선	제주지방기상청장	박	종	서
자원순환정책관	신	선	경	항공기상청장	이	재	원
환경경제정책관리	이	창	흠	국립기상과학원	주	상	원
직무대리	황	석	태	국가기상위성센터장	박		훈
대기환경정책관	서	홍	원	기상레이더센터장	이	정	환
기후변화정책관리	하	미	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류	찬	수
직무대리	조	희	송	한국형수치예보모델	홍	성	유
환경보건정책관	김	영	석	개발사업단장			
상하수도정책관	송	형	근	고용노동부			
직무대리	이	영	석	장	관	이	재
감사관				차	관	임	서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박	화	정
운영지원과장				노동정책실장	안	경	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홍	정	기	노동시장정책관	박	성	덕
단장	박	미	자	고용서비스정책관	김	영	회
조사·평가지원관	오	중	극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	덕	중
중앙환경분쟁조정	장	윤	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송	홍	석
위원장	이	병	윤	직업능력정책국장	장	신	철
국립환경과학원장	주	대	영	노사협력정책관	김	민	석
국립생물자원관장	류	연	기	근로기준정책관	김	경	선
직무대리	홍	동	곤	공공노사정책관	류	경	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나	정	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영	만
화학물질안전원장	이	학	수	정책기획관	선	우	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전	병	성	국제협력관	김	대	환
한강유역환경청장	권	경	업	대변인	이	현	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남	광	회	감사관	박	준	효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	용	목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	성	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서	민	환	중앙노동위원장	박	준	성
이사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	경	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	중	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	두	용
국립생태원장	최	홍	진	이사장	김	동	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신	도	식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상청	유	희	동	이사장	조	중	란
청장	김	남	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재	홍
차장	김	세	원	이사장	이	석	행
기획조정관	김	금	란	한국고용정보원장	김	기	영
예보국장	정	해	선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정	식
관측기반국장	이	동	규	이사장	권	영	순
기후과학국장	김	영	동	한국사회적기업	김	인	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정	성	균	이사장	노	경	란
지진화산국장	정	준	석	한국잡월드이사장			
운영지원과장							
수치모델링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수도권기상청장							
부산지방기상청장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업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고용노동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2018. 10. 30
예산결산 기금심사	문진국	신보라	자유한국당	2018. 10. 30

○의안 회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3. 이용호 · 김삼화 · 최도자 · 김광수 · 조배숙 · 김중회 · 주승용 · 이찬열 · 김두관 · 박주현 의원 발의)

10월 24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0. 24. 정부 제출)

10월 25일 회부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5. 서형수 · 김경협 · 이용득 · 김병욱 · 윤호중 · 김현권 · 전재수 · 민홍철 · 서영교 · 김해영 · 제윤경 · 권칠승 · 원혜영 의원 발의)

10월 26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6. 민경욱 · 김기선 · 강석진 · 이은권 · 이완영 · 엄용수 · 박맹우 · 박대출 · 박완수 · 김학용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6. 김태년 · 김해영 · 박광운 · 김두관 · 오제세 · 전현희 · 제윤경 · 김성수 · 김정우 · 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9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9. 원유철 · 조훈현 · 박명재 · 임이자 · 황주홍 · 박덕흠 · 윤종필 · 정병국 · 김정재 · 이만희 의원 발의)

10월 30일 회부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이종배 · 김성찬 · 추경호 · 이명수 · 최교일 · 홍일표 · 김순례 · 전희경 · 곽대훈 · 박맹우 · 이현승 · 김상훈 · 이은권 · 민경욱 · 엄용수 · 김기선 · 홍철호 · 정우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김명연 · 이은재 · 홍문중 · 원유철 · 김용태 · 강석호 · 정갑윤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박광운 · 송갑석 · 김영주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백혜련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박광운 · 송갑석 · 김영주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백혜련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윤종필 · 이은재 · 홍문중 · 원유철 · 김용태 · 강석호 · 정갑윤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윤종필 · 이은재 · 홍문중 · 원유철 · 김용태 · 강석호 · 정갑윤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임이자 · 장석춘 · 문진국 · 윤종필 · 이은재 · 홍문중 · 원유철 · 김용태 · 강석호 · 정갑윤 의원 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임이자 · 염동열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문진국 · 이은재 · 장석춘 · 홍문중 · 송희경 · 김학용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박광운 · 송갑석 · 김영주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백혜련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운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31. 박광운 · 송갑석 · 김영주 · 권칠승 · 전현희 · 윤준호 · 김종민 · 이춘석 · 윤관석 · 백혜련 의원 발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박광은·송갑석·김영주·권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준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
 이상 11건 11월 1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2018. 11. 1.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김학용·경대수·김종석·정태욱·홍문표·김용태·박성중·김성원·김무성·민경욱 의원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김학용·임이자·경대수·김종석·홍문표·김용태·박성중·김성원·김무성·신보라·민경욱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김용태·김선동·임이자·김종석·김재경·유민봉·박덕흠·황영철·박명재·정유섭·이명수·이종명·문진국·박인숙·추경호·김학용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김학용·임이자·경대수·김종석·정태욱·홍문표·김용태·박성중·김성원·김무성·민경욱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김순례·정갑윤·조훈현·원유철·곽대훈·김선동·이채익·홍문표·김성원·서청원·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이은권·김성원·金成泰·홍문표·정유섭·윤상현·이완영·박덕흠·김승희·김성찬·함진규 의원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문진국·김용태·정갑윤·임이자·장석춘·김현아·경대수·김상훈·이철규·정진석·이완영·이채익·이종명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임이자·문진국·장석춘·김용태·강석호·정갑윤·홍문표·윤종필·정태욱·원유철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문진국·정갑윤·임이자·장석춘·김현아·주광덕·박성중·경대수·김상훈·이철규·정진석·이채익·이종명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임이자·정갑윤·문진국·장석춘·홍문표·윤종필·정태욱·원유철·강석호·김성찬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6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이찬열·황주홍·권철승·김광수·윤후덕·정병국·이동섭·김삼화·김철민·조배숙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이은권·김성원·金成泰·홍문표·정유섭·윤상현·이완영·박덕흠·김승희·김성찬·함진규·추경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김영진·김병기·윤관석·박재호·강훈식·이원욱·인재근·김현권·소병훈·황희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한정애·서영교·박찬대·홍의락·이학영·우원식·남인순·김해영·송기현·박재호·서형수·강훈식·송옥주·설훈·김태년·김정우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나경원·정태욱·김성원·추경호·김광립·박명재·김종석·성일중·이철규·이학재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한정애·서영교·박찬대·홍의락·

이학영 · 우원식 · 남인순 · 김해영 · 송기현 · 박재호 · 서형수 · 강훈식 · 송옥주 · 설훈 · 김태년 · 김정우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7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7. 이은권 · 김성원 · 金成泰 · 홍문표 · 정유섭 · 윤상현 · 이완영 · 박덕흠 · 김승희 · 김성찬 · 함진규 · 장서균 의원 발의)

11월 8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8. 이은권 · 김성원 · 金成泰 · 홍문표 · 정유섭 · 윤상현 · 이완영 · 박덕흠 · 김승희 · 김성찬 · 함진규 · 추경호 · 장석준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8. 김관영 · 유의동 · 채이배 · 유승민 · 오신환 · 이태규 · 권은희 · 임재훈 · 김삼화 · 박주선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이명수 · 박순자 · 이종배 · 윤종필 · 박덕흠 · 김용태 · 성일중 · 김경진 · 김성찬 · 김석기 · 김순례 · 박명재 · 신상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8. 금태섭 · 안호영 · 전혜숙 · 이춘석 · 강훈식 · 이철희 · 백혜련 · 고용진 · 박지원 · 이학영 · 김해영 · 김현권 · 김민기 · 정세균 · 이인영 · 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5. 서형수 · 김경협 · 이용득 · 김병욱 · 윤호중 · 김현권 · 전재수 · 서영교 · 김해영 · 제윤경 의원 발의)

10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

(2018. 10. 26. 정부 제출)

10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임이자 · 정갑윤 · 주광덕 · 김성원 · 홍문종 · 신보라 · 문진국 · 장석준 · 송희경 · 김학용 · 김성찬 의원 발의)

11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위성곤 · 박정 · 김철민 · 김현권 · 설훈 · 김종민 · 홍문표 · 윤영일 · 정성호 · 이찬열 · 강창일 의원 발의)

1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 정운천 · 김동철 · 김중로 · 하태경 · 주승용 · 김수민 · 김삼화 · 이태규 · 권은희 · 이동섭 · 이찬열 · 신용현 · 최도자 · 장병완 · 이언주 의원 발의)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정동영 · 강창일 · 김광수 · 김중희 · 노웅래 · 박주현 · 심상정 · 유성엽 · 장정숙 ·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발의)

11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박완주 · 박정 · 심기준 · 우원식 · 김영춘 · 강훈식 · 심재권 · 위성곤 · 박찬대 · 김상희 · 민홍철 · 백혜련 · 유동수 · 서영교 · 맹성규 · 김영호 · 김철민 · 손금주 · 노웅래 의원 발의)

1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